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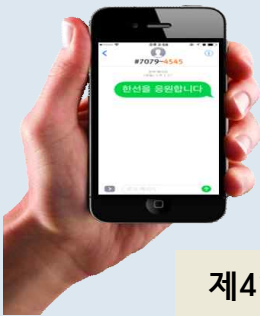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미중 갈등과 한국의 대응

[발제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일 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Google Meet 온라인 세미나



☒ 문자 후원

#7079-4545

제41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경제안보는 오래전부터 고용, 임금, 사회보장, 보건 등 개인의 경제안보차원에서만 연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주목하는 경제안보는 국가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경제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 미·중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연결시킨 경제안보를 내세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상했다.

■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 첨예화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0년 내에 판세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nvest, Align, Compete' 세 가지의 대응수단을 제시했다.

◆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안보

- ◆ 경제안보는 오래전부터 고용, 임금, 사회보장, 보건 등 개인의 경제안보차원에서만 연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주목하는 경제안보는 국가차원의 경제안보라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다. 경제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 미·중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연결시킨 경제안보를 내세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상했다.
- ◆ 생존은 현재 생존과 미래 생존으로 나뉘볼 수 있다. 현재생존은 공급망 이슈를 말한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현재 경제와 일상생활을 위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미래생존은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는 디지털 분야다. 디지털 분야는 상품, 돈, 지식, 기술이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사이버 안보도 경제안보의 중요한 토픽이다. 우리나라는 국방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접근하고 있는데 영미권에서는 경제안보차원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다.
- ◆ 첨단기술 발전은 안보 및 패권의 정의를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기술이 문제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할수록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 ◆ 중국은 그들의 세계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웠다. 중국경제와의 연계성 증가는 중국이 세계표준을 설정하는 데에 더 많은 발언권을 제공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더 큰 의존도를 유도한다. 따라서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역내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이다.
- ◆ 미국과 중국의 경제 역량을 보면 명목GDP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

다. 그러나 구매력기준으로 보면 이미 2017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의 제조공장이 되었고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대부분 국가의 1위 교역파트너 국가가 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미 가장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 ◆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세계 GDP 성장분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은 20%정도씩 비슷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미국은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고 중국이 60%에 육박하는 기여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동안 미국은 다시 예전수준을 회복했으나 중국은 예전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40%를 기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중국은 80%정도의 기여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미국의 대중국 인식

- ◆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묘사한다. 미국의 국가안보보고서에는 중국이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인 역량을 결합해서 국제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미국은 첨단기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1위를 하는 부분이 있고 10년 뒤에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수준 상승에는 불공정한 기술 탈취가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 ◆ 미국이 2018년 3월 22일 발표한 USTR의 US Section 301 Report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2017년 8월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 2025”를 114번 언급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인 ‘중국의 경제 공세를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고 이는 미·중 통상분쟁의 시작이 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1. 강요된 기술이전, 2. 차별적 기술 인허가, 3.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기업들의 공격적 해외자산 취득, 4. 기술 및 영업비밀 탈취를 위한 불법적 해킹이 있었다.
- ◆ 2015년 들어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기준 중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이 미국을 추월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수지에서 미국은 흑자가 확대되는 반면 중국은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핵심 원천기술을 외국에서 사서 응용기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핵심 원천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약점으로 공략하고 있다.

◆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

- ◆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 첨예화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삼고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nvest, Align, Compete’ 세가지의 대응수단을 제시했다.

가. Invest

- ◆ 미국의 생산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 감축법 등 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전략기술, 탈탄소, 에너지 안보 관련된 부분을 미국내에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의 대중국 정책과 다른 점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기존에는 몇 년 간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시각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을 현재수준에서 완전히 동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나. Align

- ◆ 미국은 독자 제재보다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연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가 올해 한 미정상회담 직후 출범하는 등 연대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이끌어내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 Compete

- ◆ 미국의 대중국 견제 목적은 “첨단기술의 탈동조화”이다. 수출통제, 수입제재, 투자 및 금융제재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투자 심사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업을 중국이 인수하는 것을 심사하고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심사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짓거나, 주식 매입, M&A시도 등에 대해 미국정부가 앞으로는 심사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 ◆ 중국은 혁신주도의 성장을 원하고 있다. 2019년 월드뱅크와 중국의 DRC가 공동연구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3단계를 통한 고성장 유지를 제시했다. 1.개혁, 2. 최신 기술의 보급, 3. 새로운 첨단기술 발굴이 그것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2035년까지 15년간 연평균 4.73%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했다. 미국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견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도시 봉쇄도 있으나 미국의 견제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더더지게 만드는 데에 한 요인일 것으로 분석한다.
- ◆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다보니 국제통상,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정부주도의 산업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두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 번째로는 자강, 두 번째는 협력이다. 자강을 위해서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자체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 및 보호가 중요하다. 두 번째 정책인 국제협력관련해서 WTO같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제는 마비된 상태다. 따라서 다자체제보다는 소다자체제 또는 양자체제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민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개별 국가간 관계를 강화해야한다. 미국은 중국이 포함된 다자체제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도 이에 맞춘 정책이 중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